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자포럼 회장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주제로 제2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모임인 국회출입기자포럼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유성엽 국회 교육과학기술관광위원회, 최경환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보내오고 정세균 국회의장, 김홍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공동의장, 위철환 상순관대 법대·로스쿨 총동창회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미당(未堂)문화회, 칠월동지회 등 많은 분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격려와 연대를 보내는 축하 화환도 고맙고 의미있는 일이다.

주제 논문 발표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장, 국가전략대학원을 지낸 김성주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사회는 고려대 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토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이신 박인회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신 서보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

했고, 청중의 질의와 응답도 가졌다.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국회에서 국민의 수많은 문제들을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 운동가와 관계기관, 관련 단체 인사와 시민들이 모여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가 날마다 열리고 있다. 국회출입기자포럼이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를 칼럼 주제로 삼아서 쓰는 이유는 내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 여서가 아니다.

북한이 11월 29일, 화성-14형은 미국 본토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해서 한국, 일본, 미국, 유엔, 유럽 연합(EU) 등 전 세계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 유엔은 더 강한 북한 제재를 결의했고,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주제도 가장 시의(時宜) 적절하고 발제자와 사회자, 토론자도 남북문제와 국제관계, 통일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전문가 교수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입장으로 평가받는 주제 논문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요약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냉각되고 경색되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승인했던 1972년 7·

4남북공동성명에서 표방한 평화통일의 3대 원칙 '자유,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민주'와 '조화 평등'의 원칙이 더해져야 한다.

관련국들의 북한 핵폐기 전략과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2-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북 세컨더리 제재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북한 공격(군사충돌), 리비아식 해결, 위기의 장기화 등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라는 우리의 자율적 범위를 넘어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라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분명한 것은 남북한 간 분단구조의 극복과 민족모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의 관점'이라는 문제의식과 방법론에서 실마리를 찾아야한다. '주변 환경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타인화'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현상타파' 보다는 '현상유지'에 방점을 찍는 플레임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남북한 간 신뢰 확보와 협력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과제로 자강안보, 남·북한 관계개선, 남한의 미·중과

균형외교 재정립, 미중간 이해관계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체제 하에 있다. 한민족의 미래는 대립과 전쟁이 아닌 공존공영과 평화에 달려 있다. 현재 남북이 안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다. 이는 남북한 상호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군사부문의 막대한 재정적 투입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한민족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생의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은 남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 남북한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 특히 남한은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핵무기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북한에게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문제인 정부의 당면 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환경을 해소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지난 10년 가까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고 한·미, 한·중, 한·일관계 속에서 우리 외교의 자율적 공간이 실종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북미 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two track 전략을 대안으로 남북관계개선·남북한 평화체제 수립·북한핵 해결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분단 7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이제 우리는 만나야 한다!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적 통일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명감을 잃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길만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社說

학교 주변 유해시설 없애야

정부가 전화방·성인용품 취급소 등 전국 200여곳에 달하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니 기대가 크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2018~2022년)을 8일 발표했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정책 방향 등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273개였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1천개 이상이었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은 관계부처 합동 단속 등이 이어지면서 250곳 안팎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변종업소가 늘면서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유해업소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화방 등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새로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이전·폐쇄를 유도해 유해업소를 줄여나갈 것 같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지을 때도 교육환경영향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번 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 수립한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인 만큼 관계부처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悅 豫 且 康

기 미 도 편

悅 豫 且 康

▷ 뜻: 이상과 같이 마음 편히 즐기고 살면 달란한 기쁨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무단방치 차량 신속한 철거조치 해야

최근 들어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농로나 골목길, 산 밭, 강가, 저수지 및 바닷가 등 한쪽에 방치된 차량이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차량을 버리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주택가 골목길이나 공터에 아무렇게나 버려지

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이 매년 10% 가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방치차량의 대부분은 차량 유지가 어렵거나 세금이 압류된 폐차지점의 차량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상당기간 차량이 방치되어 있다보니 유리창이 깨어지고 차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불

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기까지 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정작 큰 문제는 이면도로나 뒷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방치차량 때문에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나 순찰차의 현장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해당관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희를 통해 차량소유주에게 차량을 이전할 것을 명하게 되어 있다. 만일 이에 치자가 불응할 경우 강제 처리과정을 밝히 폐차와 말소등록을 하

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번호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암체차주 때문에 소유주를 찾는데 행정력까지 낭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킨다는 도덕적인 양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湖南新聞 (HONAM NEW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Advertisement for 'All, Hello?' (모두, 안녕하세요?) featuring a child and information about the National Health Checkup (국가건강검진).